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51
----------	-----

2023. 7. 13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임영은 의원 등 9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7월 13일

-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영은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품질점검단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, 품질점검 시기의 강화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품질점검단의 기능 구체화 조항 신설(안 제2조제2항)

- 공동주택의 건축, 구조, 조경, 안전, 실내 내장·가전, 난방·방재 등의

시공상태 자문

-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(是正) 자문
 -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·제도적 개선 권고
 - 그 밖의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
- 입주예정자에게 공고(안 제6조제2항)
- 입주예정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함
-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6조제4항)
- ‘골조공사 중’(공정률 25% 내외) 시기
 - 50% 이상의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. 다만 2회만 허용
- 점검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4항)
-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, 품질점검 자문요청의 시기 강화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- 안 제2조제2항에 품질점검단의 자문 기능을 신설하고,
 - 안 제6조제2항에 점검계획을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6조제4항에 품질점검단의 자문요청 시기를 신설하였으며,

- 안 제7조제4항에 품질점검단의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음.
-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를 위하여 품질점검단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입법예고 기간 중 품질점검단의 자문 시기를 “준공후 1년 이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를 추가(안제6조제4항제3호 신설) 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,
- 법률적 검토²⁾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.

2) 「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「주택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「주택법」은 주택의 건설·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,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, 즉 준공 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준공 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은 「주택법」이 아닌 「공동주택 관리법」에 규정하고 있음.

- 제출된 의견은 “준공 후” 까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연장하는 것으로, 이는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한 범위와 상충하며, 준공 후 공동주택의 유지·관리 및 하자보수는 「공동주택 관리법」에 따라야 함.
- 따라서 제출된 의견은 조례에 반영할 수 없음
- 아울러, 충청북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 및 재산 보호를 위해 ‘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’, ‘공동주택 기술자문단’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동주택의 건축, 구조, 조경, 안전, 실내 내장·가전, 난방·방재 등
의 시공상태 자문
2.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(是正) 자문
3.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·제도적 개선 권고
4.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

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점검단”을 각각 “품
질점검단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통보해야 한다”를 “통보해야 하며, 입주예정자가 열람
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
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사용검사권자는 제4조1항 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해 협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요청할

수 있다.

1. ‘골조공사 중’(공정률 25% 내외) 시기
2. 입주예정자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)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. 다만, 최대 두 차례만 허용한다.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 략) (신 설)</p>	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1. 공동주택의 건축, 구조, 조경, 안전, 실내 내장·가전, 난방·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2.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(是正) 자문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3.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·제도적 개선 권고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4.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</p>
<p>제3조(구성) ① 점검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~7. (생 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품질점검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품질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~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점검시기·절차) ① (생 략)</p> <p>②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품질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</p>	<p>제6조(점검시기·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품질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점검일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 현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<u>통보해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점검일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 현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<u>통보해야 하며, 입주예정자가</u> <u>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</u> <u>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사용검사권자는 제4조제1항</u> <u>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</u>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품질점</u> <u>검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 <p><u>1. '골조공사 중'(공정률 25</u> <u>% 내외) 시기</u></p> <p><u>2. 입주예정자(「민간임대주택</u> <u>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</u> <u>호의 민간임대주택을 포함</u> <u>한다)의 50퍼센트 이상의</u> <u>동의가 있는 경우. 다만, 최</u> <u>대 두 차례만 허용한다.</u></p>
<p>제7조(점검결과·조치) ① ~ ③ (생 략)</p> <p>(신 설)</p>	<p>제7조(점검결과·조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부터 제</u> <u>3항까지의 조치결과를 입주예</u> <u>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</u> <u>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자료의 요구 등) ① (생 약)	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다.</p> <p>제10조(자료의 요구 등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주택법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317호, 2021. 7. 20., 일부개정]

제48조의3(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(이하 “품질점검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·구조·안전·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·도지사(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)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,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, 입주자(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)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- ⑦ 제6항에 따라 보수·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,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, 조치결과,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,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주택법 시행령 [시행 2021. 10. 14.] [대통령령 제32053호, 2021. 10. 14., 일부개정]

제53조의2(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)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(이하 “하자”라 한다)의 범위는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, 하자의 판정기준은 같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조치계획”이라 한다)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,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.

1.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: 사용검사를 받기 전. 다만,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(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)하여 정하는 날로 한

다.

2. 그 밖의 하자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. 다만, 제5항의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(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)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.

가. 전유부분: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

나. 공용부분: 사용검사를 받기 전

③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(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.

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.

1. 내력구조부 하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

가. 철근콘크리트 균열

나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

2. 시설공사별 하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·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

- 가.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
- 나. 옹벽 · 차도 · 보도 등의 침하(沈下)
- 다. 누수, 누전, 가스 누출
- 라. 가스배관 등의 부식, 배관류의 동파
- 마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· 설비 등의 기능이나 작동 불량 또는 파손
 - 1) 급수 · 급탕 · 배수 · 위생 · 소방 · 난방 · 가스 설비 및 전기 · 조명 기구
 - 2)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

⑤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를 말한다.

1. 공사 여건상 자재,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
2.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
3.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53조의5(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)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. 다만, 시 ·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 품질점검단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법령, 입주자모집공고,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.

1. 공동주택의 공용부분
2.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
3.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